

추경 9조5천억 증액 40조 육박... 국회, 심사 돌입

예결소위 사업별 증·감액 결정
민주, 오늘 본회의서 처리 목표
안도걸, 작년 이어 소위에 참여
광주 AI모빌리티 용역 10억 증액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40조원 가까이 증액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소위’는 국회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사업별 예산 증액·감액을 결정한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에서 안도걸(광주 동남을)·이소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임미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박형수·조정훈·김대식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선임됐다.

안 의원은 “광주의 미래산업과 지역 현안 예산을 꼼꼼히 챙기고, 민생과 국가 재정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차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소득 등에 따라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예산 13조2000억원, 고금리 기간 중 누적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143만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예산 1조4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앞서 이날 오전,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순증했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결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국토위에서는 광주광역시 미래 먹거리인 ‘AI(인공지능) 모빌리티 시범도시’ 연구용역비로 10억원이 증액됐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로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이 늘었다.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근로장학금 지원사업 또한 1000억원 늘

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7600만원 증액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364억7000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168억원) 등이 늘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본 뒤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회 과방위 소위서 ‘방송 3법’ 與 주도 통과

與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할 것”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봤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와 함께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방송 3법의 소위 의결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 내정

국민의힘의 쇄신 작업을 진두지휘할 당 혁신위원장에 4선의 안철수(사진)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 단계로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셔 혁신 논의를 집



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당의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 시대 변화에 조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걸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혁신위원장에 기용된 것은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회복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해석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계원 “여수산단, 고용위기 제도 개선해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사진)은 지난 1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여수국가산단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 실태와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정책 질의에서 “여수의 석유화학산업 플랜트 건설 발주액은 2024년 대비 78.4% 감소, 플랜트 건설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26.1% 감소 등으로 여수지역 구인배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평균 구인배수인 0.5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런 데도 “여수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주력 산업 위주로 정량지표를 평가하는 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 중심에서 연관 산업의 고용 지표도 반영되도록 고용위기대응지역 지정제도의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 ‘3% 룰’ 포함 상법 합의... 정부 출범 후 첫 사례

법사위서 의결... 오늘 본회의 처리
집중투표제 등 향후 공청회서 논의

여야가 2일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3% 룰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3% 룰은 상장기업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3% 룰과 함께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인 김용민, 장동혁 의원이 이날 오후 만나 ‘3% 룰’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집중투표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2개 안은 공청회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법안 처리이자 여야 합의 처리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주 이익을 더욱 보호하고 회사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안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룰이 적용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한 2가지 쟁점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에 신호를 주는 상법 개정

여야가 이견을 보이기보다 합의해야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의결이 일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최대한 합의해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집중투표제 및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지고, 향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청래·박찬대, 고강도 검찰개혁 한 목소리

“폭풍처럼 몰아쳐 끝을 봐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2일 “대표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고강도 검찰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포)’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정청래(왼쪽) 의원, 박찬대 의원. 연합뉴스

한다”며 “검찰개혁은 땀을 흘릴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격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도 인사말에서 “이제 때가 됐다.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며 “당 대표가 되는 즉시 더는 검찰청이란 이름을 남기지 않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